

‘숙제 산적’ 巨與 이끝 원내대표 누구

3차 추경안 처리·원구성·공수처장 추천 등 강한 리더십 필요 김태년·정성호·전해철 등 물밑 선거전... 후보 교통정리 주목

오는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선출이 다가오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 역량 발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3차 추경안 심사와 처리다. 추경안 심사와 처리는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할 유능한 여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던 민주당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안정화대책과 고용안정특별 대책 등을 위한 3차 추경안을 6월 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도 중요한 숙제다. 새 국회 초반에 입법 추진력을 높여려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위원장 자리를 확보, 야당의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수처 설립을 위한 초대 공수처장 인선 역시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권 행사 등의 과정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기에 차기 원내대표는 이를 돌파할 치밀한 전략을 짜는 동시에 야당과 ‘밀고 당기기’에도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이름과 달리, 천천히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 제도 보완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공직선거법 수정에도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원내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를 자처하며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출마 의사를 굳힌 김태년 의원은 정책위의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내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실현해 제대로 일을 해낼 유능한 원내대표의 비전을 강조하는 중이다.

전해철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서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이끌고 책임감 있는 입법으로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밖에도 윤호중·노용욱·박원주·윤관석 의원 등이 원내대표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후보 간 마지막 교통정리가 주목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

여야 ‘재원 1조원 세출 조정’ 합의... 막판 난항 예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26일 청신호가 들어왔다. 여야가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기로 했던 1조원을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하고 27일부터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면서 ‘4월 추경 처리·5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 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선(先) 상임위 후(後) 예결위 심사’라는 입장에 따라 세출 조정 내용 등을 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어 막판에 난항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7일부터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한다. 이는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이 추경 심사 전체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도 27일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 심사 쟁점을 해소하면서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순서에 따른 원칙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제발행 예정인 3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만약 적자국채가 4조6000억원이 발행된다고 할 때 한 가구가 받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32만원이 국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당정 1조원 세출 조정을 어떻게 만들어놓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경우 30일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끝난 뒤 내달 초순에 본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 비대위 ‘자중지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왼쪽)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인 가운데 이에 반발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위 전력을 들고 나오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 비대위 ‘자중지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왼쪽)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인 가운데 이에 반발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위 전력을 들고 나오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진통

절차적 문제·비위 전력 놓고 거센 찬반 공방

4·15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놓고 미래통합당 내부의 진통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김 전 위원장의 비위 전력까지 들고나오며 거센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를 고리로 무주공산이 된 당권이나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거

물급’ 인사들의 견제 움직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 전 위원장을 “뇌물전과지”, “뇌물 브로커”라고 부르며 “정계 언저리에 어슬렁거리지 말라”, “부패한 비대위원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생환해 5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3선이 된 김태흠 의원, 일부 유승민계 의원들도 모두 김종인 비대위가 아닌 ‘자강론’을 거세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운영석 의원은 “공식 회의 등을 통하지 않은 결정 방식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운영석

·김태흠 의원 등은 27일 “3선 모임”을 갖고 전국위 연기를 주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비춰볼 때 28일 오후로 예정된 전국위가 실제 이뤄지거나 정족수 미달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대안 부재론’을 내세우며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선에 성공한 김도읍 의원은 “어쨌든 개혁과 쇄신은 미룰 수가 없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위원장이 ‘무기한 임기’를 주장한 바 없다고 “이 당이 대선을 치를 만한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미련 없이 “기한이 1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고 응호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혁신준비위 출범

국민의당은 26일 ‘당 체제 정비와 혁신·비전 수립’ 등을 위한 혁신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창당 정신을 구현하고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혁신준비위를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준비위는 4·15 총선 평가와 당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보완, 공약 추진을 위한 대국회 전략 수립 등을 목표로 약 1개월간 활동할 방침이다.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당 발전 방향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하는 총선평가위원회는 전 비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정연정 위원장이 맡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입지 좁아진 정의당 ‘활로 찾기’

다음달 7일 까지 총선 분석회의·17일까지 당직 개편

정의당이 총선 분석회의를 여는 등 활로 모색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오는 27일 상무위원회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된 상무위원들의 발제를 정취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총선 분석회의로, 내달 7일까지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 역시 복귀해 본격적인 당 내부 다독이기에 나선다. 심 대표는 지난 20일 상무위원회 이후 언론 인터뷰 등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상무위에서는 눈물을 쏟으며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직 개편과 원내대표단 선출 등을 통해 당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원내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추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인선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원외로 활동하게 될 현역 의원들은 주요 당직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7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상무위에서 진행된 총선 결과 분석을 공유하고, 당직 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829건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800건 넘게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지난 21일 기준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829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 의뢰가 30건이며, 사안이 가벼워 경 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시설물·인쇄물·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모임 이용,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역대 총선보다 적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선관위에 의한 고발 등은 더 늘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